

KMI 동향분석

VOL.101
2018 OCTOBER

발간년월 2018년 10월(통권 제10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윤성순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ssyoon@kmi.re.kr/051-797-4711)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hjung@kmi.re.kr/051-797-4718)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의 철거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전국 해안·강안에 설치된 413km의 경계철책에 대해 상당한 양의 철책이 이미 철거가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즉시 철거하거나 감시 장비를 보강한 뒤 철거할 예정이다.

경계철책은 지역 주민과 배후의 토지소유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철책이 설치된 해안은 생태 및 경관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었다. 해안의 철책으로 보호된 대표적 자연환경인 해안사구는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 다양성 증진, 경관 형성 등의 기능을 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재해 완충공간으로서 기능을 한 철책은 최근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지역개발 요구가 거세지면서 단계적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철거에 장애가 되었던 철거비용 부담문제 역시 국가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에 따라 철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철책에 의해 제한되고 억제되었던 해안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밀려들 것이다. 이는 경계철책 철거를 주장하는 지자체의 발표내용 대부분이 개발의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억눌렸던 개발사업들을 적절한 조절없이 과도하게 추진 한다면 그 동안 잘 보존되었던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해안개발이 난립하는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군 경계철책의 철거는 이제 사회적 공감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철책이 지녔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철책 철거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엄격한 시행과 연안완충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밀도 완화를 억제하며, 환경부는

필요지역에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철책 배후지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철책 배후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연안공간 이용이 실현될 때 철책 철거의 효과가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이 철거 중

■ 국방부는 해안·강안에 설치된 철책 약 283km를 철거하였거나 철거할 예정임¹⁾

- 국방부는 전국 해안·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413km) 중 지난해까지 114km에 대해 철거를 승인했고 (69.3km 철거 완료) 향후 나머지 경계철책 298.7km 가운데 169.6km를 철거할 예정임
- 철책은 강원도가 약 91km, 경기도 81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km, 경북 24km, 충남 20km, 전북 6km 순으로 나타났음²⁾
- 전국 61개 철책 구간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15개 구간(34.7km)은 내년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46개 구간(134.9km)은 감시 장비를 보강한 뒤 철거할 예정임

■ 동해안 중에서 강릉시는 관할 해변에서 25.6km에 이르는 군 경계철책이 철거되었거나 곧 철거될 예정임

- 강릉시 전체 해안선 길이 73.7km 가운데 철책이 설치된 구간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35.2km이며, 이중 15.0km가 이미 철거되었고 2019년까지 10.6km가 철거될 예정임

표 1. 군철책 철거 현황(강릉시)

년도	철거 구간	사업비(백만 원)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전체(철책)	35.23km	14,602	5,352	1,950	6,761
철거 대상 구간	25.58km	14,602	5,352	1,950	6,761
철거 불가 구간	9.65km	—	—	—	—
2007~2017	15.03km	6,585	1,613	827	4,145
2018~ 2019	10.55km	7,477	3,738.5	1,122.5	2,616

주: 철거 불가 구간은 암벽인 구간으로 철책철거가 불가함.

자료: 강릉시(2018), 해변 군 경계철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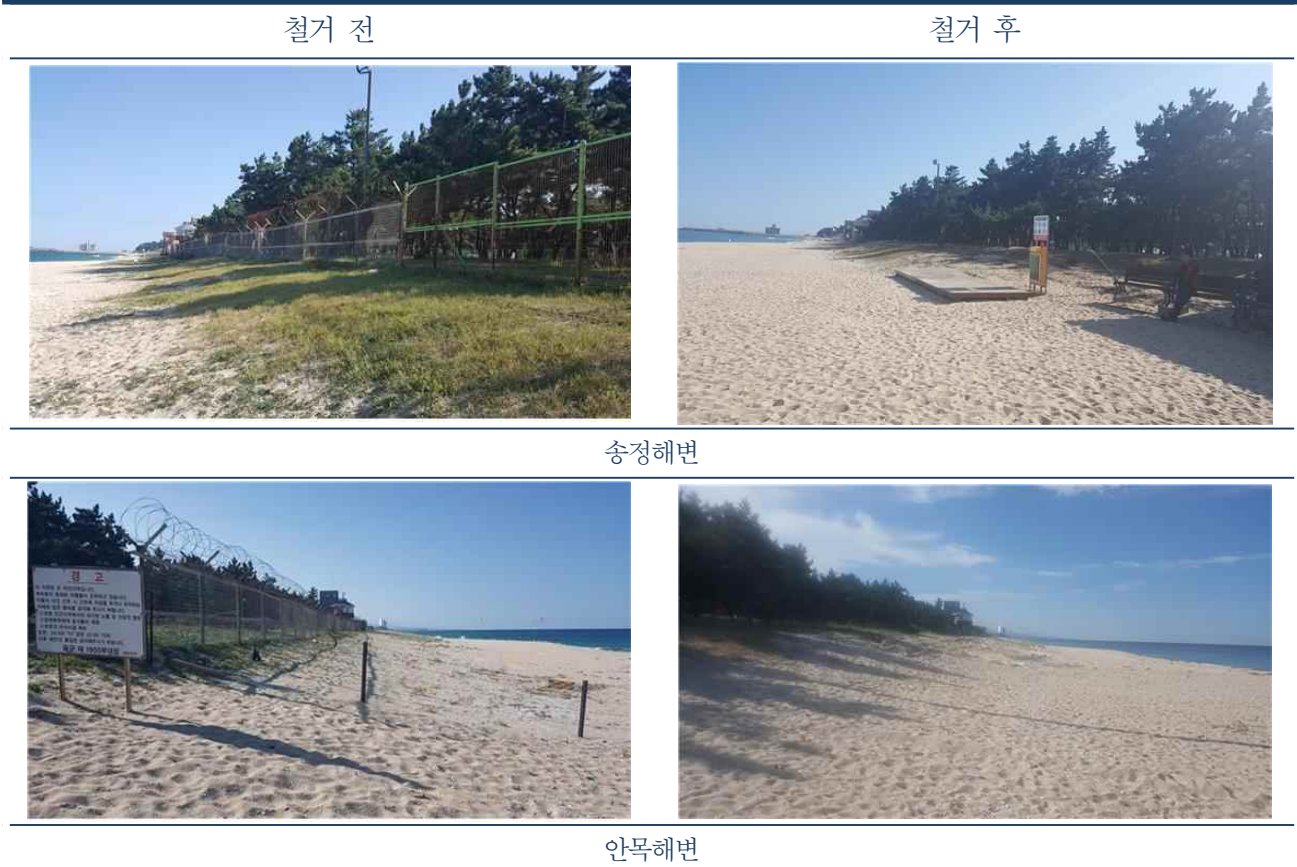
1) 한겨레 신문 보도자료(2018. 10. 18), “군 철책 철거, 접경지역 혼풍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97.html#csidxec8870fc7a68496bdb22601b677fcbd>)

2) 아시안타임즈 보도자료(2018. 9. 2), “'홍물' 해안 철책 169km "내년부터 걷어낸다"...신창현 의원”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09>

그림 1. 군철책 철거지역 사례



자료: 강릉시(2018), 해변 군경계철책 현황

군 철책이 있던 해변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 분포

■ 군 철책이 있던 해변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자연해안으로 가치가 매우 큼

- UN에서는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에서 습지, 사구, 암석, 맹그로브, 조간대 등 자연해안은 ‘공급(provisioning)부문’, ‘조절(regulating)부문’, ‘문화(cultural)부문’, ‘지원(supporting)부문’에서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음
- MEA에서 하구와 습지는 ‘식량 공급’, ‘섬유·목재·연료 공급’, ‘오염정화·해독’, ‘자연재해 방지’, ‘정신적·영감적 문화’, ‘위락’ 서비스가 탁월하고 조간대·해변·사구는 ‘정신적·영감적 문화’, ‘위락’, ‘종다양성 유지’ 서비스가 탁월하고 ‘식량 공급’, ‘심미적 문화’ 서비스도 큰 것으로 평가하였음

표 2. 연안습지 생태계 서비스

	서비스	하구및습지	맹그로브	석호 (염전포함)	조간대, 해변, 사구	켄프	암석, shell reefs	거머리말	산호
공 급	식량	●	●	●	●	●	●	●	●
	신선한물	●	—	●	—	—	—	—	—
	섬유,목재,연료	●	●	●	—	—	—	—	—
	생화학적 생산물	●	●	—	—	●	—	—	●
	유전물질	●	●	●	—	●	—	—	●
조 절	기후	●	—	●	●	—	●	●	●
	생물학적	●	●	●	●	—	●	—	●
	수문학적	●	—	●	—	—	—	—	—
	오염정화·해독	●	●	●	—	—	●	●	●
	침식방지	●	●	●	—	—	—	●	●
문 화	자연재해	●	●	●	●	●	●	●	●
	정신·영감	●	●	●	●	●	●	●	●
	위락	●	●	●	●	—	—	—	●
	심미	●	●	●	●	—	—	—	●
	교육	●	●	●	●	—	●	—	●
지 원	종다양성	●	●	●	●	●	●	●	●
	토양생성	●	●	●	●	—	—	—	—
	영양순환	●	●	●	●	●	●	—	●

주: 표 안의 원은 서비스 수준을 말하며 '●'는 낮음, '●'는 중간, '●'는 높음을 나타냄

자료: World resources Institutes,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Wetlands and Water synthesis」, pp32-33

- Costanza et al.(1997, p256)³⁾는 전 지구 생태계의 연간 가치를 총 3조 3268억 달러로 추정하였는데 연안(coastal)은 1조 2568억 달러, 습지(wetlands)는 4,879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음. 또한 단위 ha당 연간 가치는 연안지역은 4,052달러, 습지는 14,758달러로 추정하였음

■ 군 경계철폐로 보전된 해안사구는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이용가치도 높음

- 국립생태원(2016)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사구 중 27개소에는 군사시설 또는 개인 사유지 출입을 제한하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 최광희 외(2011)⁵⁾에 따르면 해안사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연재해 완충: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폭풍해일이나 쓰나미,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

3) Robert Costanza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Vol.387, 253-260.

4) 국립생태원(2016), 2016 전국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일반 현황 조사 부록보고서, p. 55.

5) 최광희 외(2011), 자연방파제 해안사구, 국립환경과학원, pp. 30-54.

- 담수 저장: 해안사구는 많은 양의 담수를 함유하여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서식하는 생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사구습지 형성
- 생물 다양성 증진: 해안사구에는 사빈과 사구의 물질교환 과정에 잘 적응한 생물들이 서식
- 경관 형성: 대규모로 형성된 해안사구는 모래사막, 초원, 호수 등 다양한 지형경관이 발달
- 연구·학술: 특정기간 동안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퇴적층에 다양한 환경기록 저장

거세지는 군 경계철폐의 철거 요구

■ 제한되었던 토지이용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기여 요구가 높음

- 해안의 군 경계철폐는 해안으로의 접근권을 차단하고, 배후 육지부의 이용을 제한하여 연안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누적됨
- 긴장이 완화되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사적 권리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별 각종 해안개발 수요가 더하여지면서 철폐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

■ 남북관계 긴장감 완화에 따른 철폐의 필요성 논란이 대두됨

-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가 급진전됨에 따라 적대적 경계의 긴장감이 완화된 철폐와 같은 물리적 차단시설의 필요성 논란이 제기됨
- 국방부는 ‘인력 위주 감시 체계’에서 ‘장비 중심 감시 체계’로 전환을 통해 현재 수준의 경계력 유지를 추진함⁶⁾

■ 철거 비용의 국가부담으로 여건이 개선되어 철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철폐철거 시 대체 경계장비 설치를 비롯한 제반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전액 국비부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⁷⁾ 2019년부터는 기존에 지자체가 부담하던 철폐 철거비용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임⁸⁾

6) 한겨레 신문 보도자료(2018. 10. 18), “군 철폐 철거, 접경지역 혼풍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97.html#csidxec8870fc7a68496bdb22601b677fcbd>)

7) news1 보도자료(2018. 10. 23), “동해안 군 철폐철거...국가가 부담해야”, <http://news1.kr/articles/?3457920>

8) news1 보도자료(2018. 4. 10), “해안·강가 철폐 철거 빨라진다...2019년부터 국비투입”

<http://news1.kr/articles/?3286126>

- 철폐비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각 지역별 철폐 철폐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군 경계철폐 철폐지역 난개발 우려

■ 군 경계철폐가 철폐된 연안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 의지가 강함

- 오랜 기간 철폐가 설치되어 접근이 제한된 지역은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철폐가 철폐될 경우 지자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철폐가 최근에 철폐되고 있는 화성시, 인천시, 속초시 등은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표 3. 군철폐 철폐지역 개발계획

지자체	개발 내용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평리) 해안가를 포함해 해송군락지 일대(14만9천㎡)에 해수욕장과 캠핑장, 야영장, 펜션단지 등을 갖춘 종합관광지로 개발 - (백미리) 염전·머드체험장, 소금박물관,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 종합 어촌체험 테마시설 조성 - '미리 맞이하는 통일한반도 생태공원'과 해안 둘레길 등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톨게이트까지 2.4km 철폐 제거,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 설치
속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향기로 조성사업(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양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 서평 기반시설 조성

자료: 화성시: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6043> / <http://news1.kr/articles/?345042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6/0200000000AKR20180426128400061.HTML?input=1195m>
 인천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97.html#csidxc10b19da149b64a8e8ceaf230eb2f3b>
 양양군: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348#08r5>

■ 철폐가 철폐되면 난개발 발생이 우려됨

- 철폐가 철폐된 연안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의지가 강해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됨
- 철폐 철폐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 철폐로 지역이 얻게 될 혜택에 관한 것이며 철폐 이후 발생할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없음

표 4. 군철폐 철폐지역 관리에 대한 기사

이슈	개발 내용
쓰레기 투기	- 철폐제거로 관광객의 해변 접근이 쉬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환경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
해변관리 공론화	- 철폐가 없어진 해변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이 갖춰져야 하고, 직접 해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지역인지도 고민 - 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과정 필요
관리주체 및 안전사고 우려	- 해안선이 개방된 일부 구간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돼 있지 않아 관리 주체가 없음 - 수영구역 표시 부표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도 전혀 없어 피서객 안전사고 우려
생물서식지 훼손	- 한강하구 철폐선 제거가 시작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이 한강을 따라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어 난개발 우려 - '생태계의 보고' 장항습지 훼손 우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083000062.HTML?input=1195m>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7566>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08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06471>

철폐 이전에 난개발 대책이 준비되어야 긍정적 효과 기대

■ 군 경계철폐 철폐와 함께 철폐의 순기능도 사라짐

- 해안의 군 경계철폐는 안보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해안 난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한 유효한 제어수단으로서 기능을 함
- 해안구조물 설치와 같은 개발이 억제되어 침식 원인행위가 없었고, 주거 또는 상업지역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입지도 제한되어 피해 규모가 최소화됨

■ 철폐 철폐 이후의 문제점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함으로써 철폐 철폐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그 동안 철폐로 억제되었거나 대기 중인 개발수요가 급속한 철폐 철폐에 따라 과도한 개발로 이어질 때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함
- 경계철폐 철폐를 통해 접근권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계 철폐의 해안 난개발 억제기능을 대신할 사전관리수단 준비를 서둘러야 함
- 중앙정부 중 해양수산부는 해당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연안완충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며, 연안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과도한 개발의 조절을 위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밀도의 완화를 억제하고,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검토도 가능함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민 등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철책 철거 배후지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철책 배후 토지소유자의 제한적 이용과 과도한 개발 자제와 같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계몽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의 병행이 필요함
- 자연환경 보전과 재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철책 배후 사유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하는 적극적인 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철책 철거가 연안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 가치의 훼손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안공간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관리가 요구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o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URL: <https://www.kmi.re.kr/>